

2022
상반기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2022.01.03.	최근 터키 환율 불안 원인 및 전망	조동희 외	01
2022.01.04.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이주관 외	02
2022.01.20.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오종혁 외	04
2022.01.25.	중동 3개국 순방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이권형 외	06
2022.01.26.	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전략과 시사점	장영욱 외	08
2022.02.03.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이재호 외	10
2022.02.04.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박정호 외	11
2022.02.16.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김민희 외	12
2022.02.23.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재완	14
2022.02.28.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박민숙 외	16
2022.03.08.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이현진 외	17
2022.03.11.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구경현 외	18
2022.03.16.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최장호 외	19
2022.03.17.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김은미	21
2022.03.21.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박정호 외	23
2022.03.23.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조동희 외	24
2022.03.24.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김도연 외	25
2022.03.31.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문지영 외	27
2022.04.05.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	정동연	29
2022.04.22.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김범환 외	31
2022.05.02.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나수엽	33
2022.05.04.	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윤형준	35
2022.05.09.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이성희	36
2022.05.10.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허재철 외	38
2022.05.13.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백종훈 외	40
2022.05.17.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안성배 외	42
2022.05.18.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정영식 외	44
2022.05.1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강문수 외	46
2022.05.20.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신민금 외	48
2022.05.24.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민지영	50
2022.05.30.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외	51
2022.05.31.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조승진 외	53
2022.06.10.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최인아 외	55
2022.06.16.	중국의 산업 인터넷 발전전략 및 시사점: 광동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김주혜	57
2022.06.20.	미국 「워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외	59
2022.06.24.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조동희 외	61



최근 터키 환율 불안 원인 및 전망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044-414-1221)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 최근 터키 리라화(TRY)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약 40% 하락하는 등 터키 환율 변동성이 심화됨.

- 물가상승 추세에 역행하는 저금리정책으로 리라화 가치는 2021년 9월 평균 1달러당 8.56리라에서 12월 17일 종가 16.41리라로 폭락함.
- 터키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예금자보호정책을 발표(12월 18일)하였으며, 리라화 환율은 다소 진정(12월 28일 종가 11.62리라)됨.
- 한편 터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6% 성장하였고 2021년 9%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함.

◎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는 터키 경제 구조와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환율과 국내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물가 상승은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를 부추겨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킴.
- 하지만 종교(이슬람교)를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성공해온 현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교의 생활 규범인 샤리아(Shariah)를 근거로 저금리 기조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음.

◎ 터키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의 추세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 12월 18일 발표된 예금자보호정책에 따라 터키 유권자의 예금 외환차손이 보호되므로 저금리 기조가 선거에서 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줄었으며, 터키 경기와 재정건전성은 신흥국 중 가장 양호한 편임.
- 기대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한 국제금융시장은 터키화 자산을 기피할 것이므로 평가절하와 고물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현재의 추세는 외환보유액 고갈,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움.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연기와 논의 전망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044-414-1089)

김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044-414-1031)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으로 WTO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 스위스가 일부 회원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회원국의 회의 참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MC12에 대해 무기 연기를 발표('21. 11. 27)
- 다만 일반이사회는 WTO 협상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22년 3월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국에 주제네바 대사들에 대한 협상권한 강화를 요청

◎ MC12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 주요 의제별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주요 이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MC12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았던 의제는 농업, 수산보조금, 코로나19 대응이었음.
 - [농업] 식량안보, 국내보조, 통보 등에서 각국의 제안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각료회의로 목표기한 변경
 - [수산보조금] 특정성 없는 유류보조금과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대립 지속
 - [코로나19 대응] 백신 지재권 면제안과 강제실시권 활용안을 두고 의견대립이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논의 진전 예상
- WTO 개혁 필요성과 주요 복수국간 협상의 각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음.
 - [WTO 개혁]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협상, 통보, 분쟁해결기능을 포함하여 WTO 개혁 논의를 독립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개도국 우대조치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2022년 내 합의 가능성은 불분명
 - [전자상거래]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데이터 이동과 현지화 이슈 등 핵심 쟁점은 답보상태
 - [무역과 개발] 개도국 졸업 및 지위결정 방식에 대한 미국 등의 개선 요구와 개도국의 특별 대우 강화 요구가 대립
- 일부 복수국간 협상의 경우 각료 선언·합의 도출 달성에 성공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 [무역과 환경] 공동성명을 도출하면서, WTO에서 무역과 관련된 환경 논의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정비
 - [여성·중소기업]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두 이슈 모두 그간의 성과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공동성명 준비
 - [서비스국내규제] 협상 타결로 참여국은 2022년 말까지 필요한 국내절차 정비하고, WTO에 관련 양허표를 통보할 예정
- ◎ MC12 연기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가능성과 무기한 연기에 따른 추동력 상실 가능성이 공존함.
- 오미크론 발생이 백신 불평등의 결과인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역과 보건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 MC12에서 WTO 개혁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DDA 폐기와 새로운 라운드 출범 가능성도 존재
 - 다자협상의 복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진국 주도의 복수국간 협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추세 지속
- ◎ 협상 연기와 WTO 기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요 의제별 복수국간 협상 진전에 대비하고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WTO 협상 연기와 다자협상 복원 가능성 저하에 따른 양자간, 지역간 협력 강화에 대비
 - 새로운 라운드 또는 새로운 WTO 체제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자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대폭 강화할 필요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 ◎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임.

 -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
-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행동방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 중국은 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분야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 탄소중립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생태환경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임.

 -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2021년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함.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 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자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간, 몰리브덴, 희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중동 3개국 순방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이권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khlee@kiep.go.kr, 044-414-1073)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044-414-1266)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 ◎ 중동 3개국 정상외교는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각국 정상과의 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우리 기업 진출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됨.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은 중동 내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 공고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호혜적 협력관계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 양자간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성과 상호보완성을 확인하고, 수소, 방산, 교역, 인프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냄.

 - [UAE] 최근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방산, 수소 등의 분야에서 수출 계약, 금융 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양자 간 협력 다각화 기조를 공고히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관련 실질적인 협력사업 도출, 수소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기반 마련, 한·GCC FTA 협상 재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이집트] 한·이집트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역 및 투자 기반 강화, 친환경 협력 등 양자 간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의 의의는 우리 정부가 중동·아프리카 아랍 국가들과 다양한 부문에서 호혜적·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데 있음.

 - GCC 국가들과의 FTA 협상 재개, 한·이집트 FTA 관련 연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히고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집트가 EU,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대이집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수소, 스마트시티, 디지털 기술, 그린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협력은 향후 공동의 발전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룩하는 토대가 될 것임.

중동 3개국 순방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 ◎ 수소 협력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안보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안보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수소경제’, ‘수소도시’ 등의 키워드가 보여주듯이 에너지 협력 분야 이외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됨.
 - 그린 수소 및 블루 수소의 생산·운송·활용 등에 연관된 저탄소 에너지기술 연구,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 운반선 건조, 충전소 건설, 금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중동 산유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전략과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e@kiep.go.kr, Tel: 044-414-1236)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Tel: 044-414-1165)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 ◎ **[확산 현황]** 2021년 11월 발견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의료체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가는 직전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감염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나, 감염 규모에 비해 입원환자 및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중증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의 절대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 부담은 기존 유행과 비슷하거나 더 크게 나타남.
 - 확진자 및 접촉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기존의 검사·추적·격리 체제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짐.
- ◎ **[주요국 대응]** 주요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방역 대응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 [미국]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별도로 강화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자가검사 활용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사회 필수기능을 유지하려 함.
 - [영국] 일시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일명 'Plan B')을 강화하였으나 감염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방역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백신 접종과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전제로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일본]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 일부 지역에서 '만연방지 중점조치'를 시행하며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PCR 무료 검사 확대와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 연장을 통해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이스라엘] 접종 인센티브 추가 도입을 통해 추가 접종을 독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입국 제한 조치는 점차 완화하면서 중증 예방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 **[시사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 통제와 사회기능 유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어 당분간 감염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전략과 시사점

- 감염 확산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로 인해 사회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음.
- 백신 접종, 중증 병상 확보, 기본 위생수칙 준수 등을 통해 감염 규모가 의료체계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응전략을 ‘중증 및 사망 피해 방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대규모 유행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변화와 지침 준수에 대한 방역당국의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임.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044-414-1134)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1월 한달 동안 석탄 수출을 중단하고 2022년 보크사이트, 2023년 구리 수출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발생함.
 - 상기 석탄 수출 중단 조치는 석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출 물량 확대에 발생한 내수 공급 부족에 대응한 것으로, 국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수출은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는 지속됨.
-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석탄 수출 2위, 니켈 생산 1위의 동남아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으로,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에 따라 시기별로 광물 수출이 제한되면서 주요 광물 수출량이 급등락해왔음.
 -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광물 수출 업체들에게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대다수 업체들이 제련소 구축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수출 제한과 허가가 반복되어왔음.
- ◎ 향후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정책과 기업들의 전략적인 현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의 석탄 내수 공급 부족 문제가 조기에 안정화되면서 한국의 석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對세계 보크사이트와 구리 수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수출 중단으로 인한 광물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함.
 - 정부 및 유관 공기업은 광물 생산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광물의 공급 관련 대화·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국가로의 투자 진출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상류 부문까지 투자를 확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 ◎ [갈등 원인]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임.
 -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한편,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함.
- ◎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러시아와 서방 간 안보회담에서 ‘NATO의 동진’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
 - 러시아는 안전보장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데 비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음.
- ◎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영향]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견실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 영향]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협력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임.
- ◎ [전망 및 시사점]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 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축,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044-414-1522)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 최근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채무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 [대외채무] 스리랑카의 외채는 2021년 3/4분기 511억 달러로 GDP의 62%까지 증가했으며, 이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9년도 대비 3%p 증가한 18%를 기록함.
- [외환보유고] 2018년 4월 사상 최고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1월 10억 달러까지 급감한 이후 2022년 1월 20억 달러까지 회복함.
- [인플레이션]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디폴트 우려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리랑카의 국가신용 등급을 각각 CCC+ → CCC(2021.12.18), CCC → CC(2022.1.12)로 하향 조정함.

◎ 스리랑카 경제 불안정성의 확산에는 국채발행 증가, 관광산업 침체, 농산품 수급 불안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스리랑카는 인프라 개발 및 기존 외채 상환을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만 44억 달러 상당의 국채(ISB)를 발행함에 따라 외채가 급격히 증가함.
-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하였으며, 이에 2021년의 관광수입은 2018년 대비 약 94% 감소한 2억 6천만 달러에 그침.
- 2021년 도입된 유기농업 정책은 생산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져 2021년 10월 주요 식료품의 평균 도매가가 4~24%가량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 수출입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 스리랑카 정부는 다방면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대외채무 증가 △루피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취약성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관광업 침체 및 해외송금 유입액 감소 등은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만으로 신속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

- ◎ 한국은 ODA, 직접투자 등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온 가운데, 스리랑카 경제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 ◎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해 과도정부를 수립(8월)한 가운데, 민주진영에서는 국민통합정부(NUG)를 수립해 시민불복종운동(CDM)과 무장투쟁을 병행함에 따라 미얀마에서는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군부는 강경 및 유혈 진압을 지속하면서 2023년 8월 총선 실시 일정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한편, 민주진영은 시민불복종운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방위대(PDF) 주도로 일부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함.
- ◎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응은 ‘미국과 EU 주도의 선별 제재’와 ‘아세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로 귀결되고 있으며, 중재의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제재는 주로 미얀마 군부 관련 주요 인사나 관련 기업(기관)에 국한된 가운데 최근 그 대상이 추가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는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자제, 특사 파견, 당사자간 대화 등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 체결(4월), 미얀마 군부를 제외한 정상회의 개최(10월) 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음.
- ◎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 여파로 미얀마 경제는 2020 회계연도(2020. 10~2021. 9)에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사회가 안정되고 비즈니스 활동도 정상화되면서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음.

 - 미얀마 경제는 특히 2020 회계연도에 대외무역 감소, FDI 부진, 환율 급등 등으로 마이너스 18%라는 기록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토탈(TotalEnergies), 텔레노르(Telenor), 셰브론(Chevron), 토요타(Toyota) 등의 투자 중단 및 철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 군부와 민주진영 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부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져 2023년 중반 이후에는 군부 권위주의 또는 떼잉세잉 정부 당시의 규율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음.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군부에 비해 민주진영의 활동은 구심점 부재와 군부의 탄압 등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아세안의 중재 노력 역시 자체의 내정불간섭 원칙 기조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음.

◎ 한국은 정부와 기업 모두 미얀마의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차원의 대(對)미얀마 경험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의 경우 미얀마의 정세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2차 제재 가능성, 더 나아가 현지법인의 인권상황이나 파트너 기업의 상황도 고려해 미얀마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내용을 종합한 최초의법률로 △개인 정보 처리원칙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 제한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률 책임 등에 대해 규정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하며 △미성년자 연령 규정 △민감 개인정보 범위 △정보 보존 연한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조항 등이 포함되어 더욱 엄격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역외 전송 시 중국 국가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시 추가 의무를 부여하여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함.

- ◎ 중국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전방위적인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재정비된 사이버 보안 관련법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이 디지털 통상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국정부는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조치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기업은 중국 내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했으며,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 △유럽의 집적 반도체기술 설계능력 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파일럿라인 지원 및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반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공급 안정화(Security of supply) 체계 마련] 처음 시도되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설비인 ‘통합생산 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체계 형성]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체계 (coordination mechanism)를 마련하여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자 함.
 - 동 법안을 기반으로 총 430억 유로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부족 관련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럽 내 관련 산업계의 동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EU의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044-414-1271)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044-414-1156)
김종덕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jongduk.kim@kiep.go.kr, 044-414-1181)
김현수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044-414-1087)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skang@kiep.go.kr, 044-414-1058)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hhkim@kiep.go.kr, 044-414-1135)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엄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전문연구위원 (jheom@kiep.go.kr, 044-414-1149)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mjkgang@kiep.go.kr, 044-414-1196)

-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
-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고기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사업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양국간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가 고도화됨.
 -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각국의 수출에서 상대국 내 생산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비중이 FTA 발효 이전(201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상승함(2019년 기준).
 -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한미 FTA 이후(2012~19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
 - 한미 FTA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10년간(2011~20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임.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북한은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함.- 오히려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41.0% 감소하고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경제 건설 관련 국가 예산 배정분도 미미한 수준임.
-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남포항 방역설비 완비(2020. 3),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신의주세관·의주비행장 방역설비 완비(2021. 3)와 함께 평안북도 룡천항의 추가 개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 유일무역 제도(중앙집권식 무역)로 환원하여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 격리, 중단)의 무역정책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

 - 현재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 ◎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044-414-1037)

- ◎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대한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다자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수립한 수송 부문의 감축정책은 △ 감축목표 설정 △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대 △ 내연기관 차량 퇴출 △ 도로 외 영역에서의 감축 노력 등을 강조
 - 해운 분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할 뿐이나 총배출량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해운의 경우 국가간 이동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다자협력이 필요
- ◎ 주요국은 해운 분야에 특화된 감축전략과 배출 규제를 수립·강화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감축목표 상향과 시장기반 조치(탄소세 등) 도입 여부를 논의 중임.

 - EU는 △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해운 분야 편입 △ 선박연료 규제(FuelEU Maritime) 신설 및 면세조항 폐지 △ 인프라(대체연료 공급시설) 구축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별도의 로드맵 등을 수립
 -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 상향과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배출 제로 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세계 항만 기후행동 프로그램(WPCAP) 등도 감축 노력을 추진 중
- ◎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수송 및 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 저탄소·무공해 연료 및 인프라 확대 △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 다자협력 활성화 △ 민간의 감축 노력 및 해외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선박 관련 배출량을 줄이고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추진할 필요
 - [저탄소·무공해 연료 및 인프라 확대] 민간이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무공해 연료를 개발·활용하도록 지원체계 정비, 안전관리 기준 수립,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추진
 -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국제해운 관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감축 목표, 이행 계획, R&D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IMO의 환경 규제 및 감축목표 상향에 대비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 [다자협력 활성화] 다양한 도시(항만),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안정적 해외 연료 도입을 위해 파트너국(호주 등)과의 에너지·환경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사업 개발 과정 지원
- [민간의 감축 노력 및 해외 규제 대응 지원] 감축 조치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고려하고, EU의 배출 규제, 시장기반 조치 도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방안 모색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분야별책임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연원호 경제안보TF위원장 (대러 제재,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강구상 미주팀장 (미국,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조동희 유럽팀장 (유럽, dhjoe@kiep.go.kr, Tel: 044-414-1123)
이승신 중국경제실장 (중국, sslee@kiep.go.kr, Tel: 044-414-1235)
김규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일본, keiokim@kiep.go.kr, Tel: 044-414-1017)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경제/거시금융,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배찬권 무역통상실장 (교역/투자, ckbae@kiep.go.kr, Tel: 044-414-1208)

- ◎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임.
 -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우크라이나의 종립화 방안, 영토 주권 문제)가 존재하므로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 [주요국의 대러 제재]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음.
 - [수출통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대상 및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MFN]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인 MFN 지위 취소의 통상법적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됨.
 - [금융제재]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 동결조치에 동참함.
 - [한국의 동참] 우리 정부도 3월 2일부터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3월 13일부로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SWIFT 배제를 적용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미국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2021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시사하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함.
- EU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2022년 2월 말에야 대응을 시작하였고, 특히 EU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EU의 대러 제재에 대한 주요 제약요인으로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정치·안보 분야에서 EU의 약한 결속력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를 꼽을 수 있음.

- EU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비우호적인 동유럽 국가들조차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 주도 대러 에너지 제재 동참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큼.
- EU 회원국간 경제통합은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통합이 약하고, 회원국간 입장도 상이하며 독자적인 군사력도 부족함.
- 집권 기간(2005~21년) EU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사임 이후 EU 역내 리더십이 아직 약하고, 현 독일 연립정부의 구성 정당간 대러 입장도 상이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가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전망이다 가운데 친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대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 EU는 이번 사태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려 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는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일부 핵심부품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EU는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치·안보 분야에서 EU의 리더십 제약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요청이 회원국 확대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Tel:044-414-1257)

백중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Tel:044-414-1323)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jgkim@kiep.go.kr, Tel:044-414-1093)

-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편잡,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5개 주 의회 선거가 2022년 2~3월 실시되었으며, 3월 10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BJP(인도국민당)가 4개 주에서 승리 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BJP는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우타라칸드에서 재집권을 달성했고, 고아 및 마니푸르에서는 제1정당의 위치를 확보하였음.
- ◎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가 5개 주 공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별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됨.
 -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1~3월 9.1%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이었던 4~6월에는 20.9% 까지 상승하는 등 일자리를 포함한 생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음.
 - 그러나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제도 회복해 불안정 요소가 많이 해소되어 실업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팬데믹 시기에 실시한 보조금 지급, 영세업종 구제책 등 민생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 ◎ 2024년 총선에서 BJP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5월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Abhiyaan) 캠페인을 발표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 강화,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PM 가티 삭티(Gati shakti)를 발표하고 2022/23년 예산안에 2,000억 루피를 할당함.
 - 한편, 2021년 1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 2021년 11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 일자리(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향후 예정된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 ◎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함.
 -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 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 전략을 발표함.
 -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한국의 중국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은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시장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 ◎ 한국과 코카서스 3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으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코카서스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아시아와 유럽,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임.
 - 한국의 대코카서스 교역은 2021년 기준 수출 2억 3,400만 달러, 수입 6,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8년부터 신규법인이 1건도 보고되지 않는 등 투자가 정체된 상황임.
 - 아제르바이잔이 2016년 제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선정한 제3기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면서 원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다만 조지아, 아르메니아에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문이 간편해지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인적 교류가 빠르게 증가함.

- ◎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질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코카서스 3국의 전략적 가치와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의 북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농업과 더불어 식품가공, 교통·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후 회복한 영토를 재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조지아는 수력발전 인프라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해당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 또한 정부간 협의의 정례화, ODA 전략 전환, 인적 교류 확대 등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부간 협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소통을 확대하고, ODA를 정책자문,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민간진출과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

- 인적 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항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임.

- ◎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질서, 세계무역환경 및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코카서스를 포함한 북방 국가와의 협력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김범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bhkim@kiep.go.kr, 044-414-1041)

한하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hlhan@kiep.go.kr, 044-414-1126)

-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봉쇄, 이동 제한, 직장·학교 폐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쳤으나,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음.
 - 초기에 실시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률, 소비, 제조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대부분 국가의 중앙정부와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고강도 방역정책에서 저강도 방역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및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 내륙 개발도상국 역시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강도를 강화했으나,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수용하면서 이와 함께 경제 및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 내륙 개발도상국은 북한과 함께 국경봉쇄라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음.
 - 내륙 개발도상국은 열악한 보건인프라로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세계 평균 수치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면서 방역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 ◎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강도의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신종 전염병 확산 억제에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클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로 인해 북한의 GDP는 2020년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북중 무역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함.
- ◎ 세계적 방역 흐름과 동떨어진 채 고강도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이 취할 정책 시나리오 검토와 함께 대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백신 접종과 광범위한 감염에 의한 면역 형성은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북한은 현재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임.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 현시점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4가지를 검토하면서,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방역 정책 완화	X	O	X	O
백신 접종	X	X	O	O
(+)	단기적으로 코로나 19 확산 억제	소규모 경제회복	코로나19 확산 억제 가능성	경제 및 일상생활 정상화
(-)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고립	대규모 전염병 확산 가능성	절반의 경제 정상화	단기적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인도적위기,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비	보건·의료 위기 가능성에 대비	북한 내부상황 모니터링 필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 모니터링 필요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 ◎ USTR에서 발표한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2. 3. 1),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2. 3. 31),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2. 2. 16)의 대중 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함.
- ◎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대중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중국의 국가주도·비시장 경제·무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근원적 접근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중 통상 대응전략 마련에 초점을 둠.
 - 새로운 대응전략은 다각적·총체적·장기적 접근을 의미하는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포괄함.
 - 동맹국 및 생각이 같은 주요국과 지역간·다자간 새로운 연합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 인·태지역 주요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 대중국 견제·제재를 위한 국내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초당적 패키지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공동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 규범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강제노동은 바이든 행정부하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2022. 6. 21. 발효 예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임을 시사
- ◎ 2022 USTR 통상 보고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국가·경제 안보 관련 통상분쟁 대비] 미·중 통상갈등 확산에 따라 국가·경제 안보가 제재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향을 감안,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제도 보완·정비 노력이 요구됨.
 - [IPEF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IPEF 주요 의제(노동·환경, 디지털경제, 공급망, 탈탄소화)의 전략적 중요성·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입장을 정립해야 함.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 이를 위해 IPEF 추진 과정을 지속 관찰하고, 국익과 안보를 핵심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대중 통상 관련 법안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제재 대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 [강제노동·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대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 및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통상마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 ◎ 2022년 4월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현 대통령이 58.54%를 득표하여 41.46%를 얻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함.

 - 4월 10일(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각각 27.85%, 23.15%를 득표하여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음.
- ◎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도 신진 정치세력’의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정치 양극화와 대중의 정치 불신 또한 드러남.

 -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격차가 17%p로 나타나, 2017년 대선 결선투표 당시 양 후보의 격차인 32%p 대비 줄어들며 극우세력이 약진함.
 - 그 외에도 극좌인사 장뤼크 멜랑송(Jean-Luc Mélenchon) 후보와 극우인사인 에릭 제무르(Eric Zemmour)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됨.
 - 결선투표에서 백지투표가 6%(약 220만 표) 가까이 발생하여 반정치 정서가 간접 표출됨.
- ◎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연금제도 개혁,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짐.

 -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함.
 -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환경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이 하락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움.
-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제제도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추진력 확보 여부는 6월 실시 예정인 총선 승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연금개혁 및 급격한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2018년 노란조끼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6월에는 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가 마크롱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Tel: 044-414-1234)

- ◎ 2022년 2월 28일~3월 2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

 - 지난 20년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존 폐기물 처리 위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 G7, G20, WTO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G7과 G20은 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는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EU는 역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의존하던 미국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려 함.
 - 중국은 2017년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아세안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한 역내 공동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이 생산·소비·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협상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민관 공동의 대응을 통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데이터 보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대체 소재 개발,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생산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나 개도국의 폐기물 처리 및 해양폐기물 대응을 지원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Tel: 044-414-1042)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Tel: 044-414-1283)

- ◎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종이 유행하는 가운데, 2020년 연초 급증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내 확진자 수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함.

 -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 장춘(长春),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줄곧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조기 발견 △빠른 포위 △전파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다섯 종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고, 자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백신과 달리 치료제의 경우 최근 외국산 수입을 승인함.
- ◎ 감염 재확산과 주요 도시의 잇따른 봉쇄로 인해 중국경제는 물론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과 부품 수급, 그리고 우리 제조업의 소재·부품 공급망에 있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4월 중국의 비제조업 PMI가 41.9까지 급락했고, 서비스업 PMI는 40.0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하락해 2년래 최저치인 47.4를 기록함.
 -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상하이·베이징·산둥·장쑤 등 지역도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아 현지 한국 생산법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영업 및 서비스 법인 또한 매장의 정상 운영에 타격을 받음.
 -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전면 봉쇄에 들어갈 경우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과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은 적어도 2022년 말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산발적 집단 감염에 강력한 통제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 다만 최근과 같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통제 불능의 대규모 감염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강력한 통제정책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는 재중 한국인 및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급망 안전 등 경제안보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보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 ◎ 2022년 4월 9일 국회의 총리 불신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파키스탄의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 2022년 2월에 상정된 불신임안은 의회 해산 및 대법원 판결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4월 9일 국회 투표를 통해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됨.
 - 중도우파 정당인 PML-N(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편집주 총리를 세 차례 역임했으며, 편집주 부호이자 유력 정치가문인 샤리프 가문 출신으로, 과거 총리를 세 차례 지낸 나와즈 샤리프의 동생이기도 함.
- ◎ [정치적 배경] 총리-군부 간 갈등과 임란 칸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권 교체의 요인으로 작용함.

 -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핵심 실권세력인 군부와 외교노선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상호 갈등관계는 국회의 총리 불신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정책 실패 등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연립정부 내 갈등이 연정 이탈로 이어지며 총리 불신임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
- ◎ [경제적 배경] 내수·저개발 국가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의 펀더멘털이 최근 더욱 악화되고, 대외부채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 등 대외경제 여건도 대폭 악화됨.

 - 임란 칸 총리 집권 기간 중 파키스탄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됨.
 - 대외의존도가 높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최근 대외부채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함.
- ◎ 임란 칸 총리의 실각에는 최근 파키스탄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권 교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치체제의 특징과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두드러졌음.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 ◎ 신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 경제위기 해소 및 정치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샤리프 총리는 대외 경제지원 모색 등을 통해 현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파키스탄과의 안정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 ◎ [세계경제] KIEP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1.1%p 하향조정하여 3.5%로 전망하고,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로 전망

 - 2022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 통화정책 △ 지정학적 충돌 △ 방역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경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 [선진국] 전쟁은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는 통화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경기회복세를 둔화

 -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
 -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월 21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4월 26일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지출 등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신흥국] 대부분의 신흥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나, 아세안 5개국은 대체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

 -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인도는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
 - 아세안 5개국은 국별 차이는 있으나 내수회복 및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성장세를 회복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 러시아는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높은 인플레이션 △러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
- 브라질은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등)과 원자재(철광석, 원유 등)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는 하방요인으로 작용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ysjeong@kiep.go.kr, 044-414-1141)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hyosangkim@kiep.go.kr, 044-414-1065)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044-414-1189)

양다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044-414-1223)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

- 정책 기반 및 결제 기능 강화(2009~14년):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홍콩 중심의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
- 후퇴(2015~16년):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및 위안화 가치 절하로 대부분의 위안화 국제화 지표 하락
-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2017~20년): 역내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투자 통화로의 역할 확대
- 국제화 재개(2021년 이후): 신(新)성장전략(쌍순환 전략), 일대일로, 디지털 통화 등을 통해 새로운 방향 모색
- 하지만 현재 위안화 국제화 수준은 외환보유통화, 자본·무역거래, 외환시장 등의 사용도 측면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2~3%에 그치고 있어 미 달러화 등의 국제통화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등의 통화 협력을 추진

- [한·중 통화스와프] 2002년에 처음으로 체결된 이래, 2020년 590억 달러 규모로 확대 되었으나, 무역결제 안정화 및 원화의 국제적 사용 제고를 위한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도는 낮은 상태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기업의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한 대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으나, 일평균 거래규모가 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

◎ 분석결과,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위안화와의 환율 동조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원화 국제화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 [위안화 동조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청산은행 설립,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 따라 위안화 동조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화 국제화 영향]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예금, 원화 금융자산 투자 감소로 원화 국제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원화 국제화 추진을 미룸에 따라 통화 국제화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

◎ 본격적인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원·위안화 간 동조화가 심화되고, 원화 국제화가 약화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

- 한국의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등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원화 국제화 추진도 전향적으로 검토
- 한·중 통화스와프 활용 촉진 등 원화 국제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간 협력방안 모색
- 한편 글로벌 통화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장 (kangms@kiep.go.kr, Tel: 044-414-1204)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ijeong@kiep.go.kr, Tel: 044-414-1225)

- ◎ [식량수급 대외 의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곡물시장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의 식량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21.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 공급의 약 13%, 해바라기씨유 공급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어 지난 2월 말에 발생한 러-우 전쟁은 세계 곡물시장 가격에 충격을 주고 있음.
 -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밀 및 옥수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이집트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 의존도는 40%에 육박함.

- ◎ [러-우 전쟁 이후 곡물가격 상승과 각국 정부의 조치] 전쟁 발발에 따라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수출규제가 시행됐으며 곡물과 유지류를 중심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FAO 식품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곡물과 유지류를 중심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을 포함한 곡물, 채유, 설탕, 비료 등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레바논 등 중동, 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가나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도 연이어 작물 및 비료 수출금지를 시행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금지 조치 시행으로 인해 북동부 아프리카는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함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도 곡물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전망 및 시사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의 밀 수급이 불안정해져 각국의 국내 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내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감소, 운송비 상승, 그리고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가 지속될 경우 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남아공, 말라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이집트는 GCC 국가 및 EU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그렇지 못한 튀니지, 에티오피아, 수단, 가나, 나이지리아 등의 경우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
- 기후변화로 중국, 인도 등에서 작황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규제에 따른 밀 농가 연쇄 도산과 러시아 비료 수출규제에 따른 농지 면적 감소가 세계 농산물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공급망이 축소될 경우,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밀, 옥수수 등 곡물 수입 규모가 급감하고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취약국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 곡물 비축 등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 노력과 함께 식량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 ◎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7대 필리핀 대선의 비공식 개표 결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진영이 각각 60%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을 거둬.

 - 마르코스 주니어는 SNS 활용, 정책대결 지양,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회피,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대 등의 선거전략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둬.
 - 이번 대선은 필리핀 정치의 전통 지속,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 증대, 사라 두테르테의 미래 점검 등의 의미를 가지나, 고물가·실업·빈곤 등 필리핀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미흡함.
- ◎ 마르코스 주니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 두테르테와 러닝 메이트로 대선을 치름에 따라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마르코스 주니어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회복, 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및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신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해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노선을 계승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사회] 세습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 및 마약과의 전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마르코스 가문의 정치 복귀에 따른 사회 분열 심화 가능성이 있음.
- ◎ 신정부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면 2010년대 실현한 고성장세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정부는 필리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음.
 - 한국은 경제·사회 인프라 확충, 제조업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협력을 필리핀의 발전과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간 또는 한국-필리핀-아세안을 연계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 ◎ 2022년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령령 제252호」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되었음.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임.
 - 이번 조치는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음.
- ◎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지목된 31개 제재 대상기관은 모두 천연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가스프롬과 관련된 업체이고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금지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EU가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채택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 것은 EU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 ◎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EU는 탈탄소 및 탈러시아 정책 강화, 러시아는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추구하게 되면서 에너지 국제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변화가 전망되므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 간 제재 및 맞제재 추이로 인한 에너지 갈등 고조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김다울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dwk129@kiep.go.kr, Tel: 044-414-1070)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ykwon@kiep.go.kr, Tel: 044-414-1086)
박은빈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21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9년 만의 일이며,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대북정책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북정책]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을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진흥 협력 △국방·원자력·기후변화 대응·우주 부문 협력 △에너지안보 증진 등 공급망 관련당면과제와 장기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조치의 구체화,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핵·재래식 무기·미사일 등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하고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확장 억제방안을 공약함.
-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간기업의 상호투자 협력, 양국간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신설 등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양국간 국방·우주·바이오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음.

◎ 이에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기존 및 신설 대화 채널 활용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의 국제공조 및 기술협력 강화 △미국과의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한 원자력 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논의 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조승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jcho@kiep.go.kr, 044-414-1248)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즈 (Anthony Albanese)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함.

-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끌던 자유국민연합은 2019년 산불 사태 대처 부실, 2021년 정치권 성추문 스캔들,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 등 국내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재집권에 실패함.
- 반면 노동당은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는 동시에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자제하는 등 2019년 총선 전략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창출에 성공함.
-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은 ‘생계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로, 노동당은 자유국민연합 집권 기간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움.
-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내세운 무소속 및 녹색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노동당도 자유국민연합에 비해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함.

◎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전 자유국민연합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새 정부는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생계비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알바니즈 총리의 선거 기간 유세 발언과 퀴드 정상회담 발언을 종합하면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50억 호주달러(106억 미국달러) 규모의 국가재건 기금을 통해 호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 ◎ 신정부에서도 한·호주 간 전략적 협력 확대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한·호주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국과 호주 신정부 간의 긴밀한 대화가 요구됨.
 - 한국과 호주는 2021년 12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 경제협력 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며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정부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기존에 협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호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신재생에너지, 광업·희토류 기술 개발,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Tel: 044-414-1134)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 ◎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에 참여함.
 - 당초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일찍이 참여 의사를 밝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IPEF 출범식에 참여함.
- ◎ 아세안 주요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약화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IPEF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IPEF 출범 직전인 5월 12~13일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PEF가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는 점과 IPEF를 통한 미·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전망을 시사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을 것으로 관측됨.
 -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부 필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IPEF 참여의 애로요인을 줄여 주었으며, 대만의 IPEF 참여 불발 역시 중국을 의식하던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낮추었음.
- ◎ 아세안 주요국은 일단 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후 향후 IPEF의 논의 전개 상황에 따라 특정 필라에의 최종 참여를 결정하는 실리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되기도는 초기 멤버로 참여해 아세안공동체 혹은 자국에 유리한 규칙(rule)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IPEF 논의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들은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며, IPEF가 중국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함.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 ◎ 아세안 국가들의 대거 참여로 IPEF는 역내 주요 다자경제협력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 국가들이 IPEF 특정 필라에 최종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참여 전망은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IPEF 협상에는 참여하되 IPEF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특정 필라에 대한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 발효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산업 인터넷 발전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044-414-1283)

- ◎ 중국은 ‘산업 인터넷(Industrial IoT)’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융합 기술로 중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은 요소 가격 상승, 생산 비용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부상, 선진국의 산업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 전반의 질적 제고와 효율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 중국정부는 2017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인 「‘인터넷+선진 제조업’ 심화를 통한 산업 인터넷 발전 지도 의견(~2050년)」을 발표하고, ‘산업 인터넷 특별 업무조(공업정보화부 주도)’를 편성
 -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산업 인터넷 산업 협회’를 조직하고 플랫폼 아키텍처, 정보 보안, 산업개발 등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 ◎ 중국정부는 산업 인터넷 육성의 핵심인 △네트워크 △플랫폼 △보안 △데이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안 및 데이터 영역은 ‘국가-지역-기업’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가 해당 영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국가-지역-기업’의 급별 ‘산업 인터넷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간 연계를 강화해 데이터의 공유와 교환을 촉진할 계획
- ◎ ‘국가급 산업 인터넷 시범구’로 지정된 광둥과 산둥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산업 인터넷 응용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지역별·업종별 스마트 공급망이 형성·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광둥성은 각 산업클러스터에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전자정보-Huawei, 로봇-Huawei, 맞춤형 가구-RootCloud) 산업사슬 전·후방 제조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설비 및 시스템을 산업 인터넷 플랫폼에 연결하여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
 - 산둥성은 원자재, 장비 제조,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내 화학공업 규모 1위 지역인 만큼 Haier과 함께 84개의 화학공업 클러스터를 플랫폼으로 연결·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 전체의 화학공업 산업 지도를 구축

중국의 산업 인터넷 발전전략 및 시사점: 광등성과 산등성을 중심으로

- ◎ 중국은 산업 인터넷 핵심 기술(스마트 센서, 전기 자동제어 시스템, 연구 설계 SW)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자립 정책을 추진 중이나, 단기간 내 큰 기술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우리 기업이 산업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중국 스마트 공급망에 진입한다면 취약한 보안 기술로 인한 생산·경영 데이터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진입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내 제조 공급망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비가 필요함.
 - 한·중 양국은 제조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스마트 공급망에 진입할 여지가 큰 상황으로,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협력 등을 중국정부와 협의해볼 수 있으며, 한국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안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국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공급망이 외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참여 기업의 데이터를 국가가 확인·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임.

-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또한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 및 입국·비자 제한조치) 규정도 포함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통상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이 같은 미국의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의지와 대응을 집약한 결과물임.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범위가 확대되고, 강제노동 관련 인적제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강제노동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됨.

- 바이든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중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하고 대중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과 강제노동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향후 강제노동 관련 규제를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워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워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규제 관련 논의 확대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강제노동과 같은 보편적 가치문제가 통상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중요
 - 우리 기업도 「워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규정에 의해 통상제재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 「워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전략 보고서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오탈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 현지 시각 6월 12일(1차 투표)과 19일(결선 투표)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을 상실하였고, 좌파 연합인 NUPES(Nouvelle Union Populaire Ecologique et Sociale)와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각각 2, 3위로 약진함.

- 제5공화국(1958년~) 체제에서 실시된 총선 중 가장 분열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출범한 마크롱(Macron) 2기 정부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도 일부 낙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 2기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함.
- 반면에 Rassemblement National은 창당 이래 최대 성과인 89석을 거두어 처음으로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입법 과정과 행정부 감시 활동에서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
- NUPES는 1차 투표의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앙상블(Ensemble)’과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다투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127석을 획득하여 총 131석(1차 투표 당선 4석 포함)으로 제2당이자 제1야당이 됨.
- 전통적인 우파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은 61석을 획득하여 의석수가 크게 줄었으나, 야당 중에서는 여당과 공조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국내 개혁정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

-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극복과 개혁 완수를 위하여 여당에 대한 과반 지지를 촉구하였으나,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
- 대표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은퇴연령 상향(62세→65세)을 추진해온 반면, NUPES는 은퇴연령 하향(62세→60세) 조정을 주장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 1기(2017~22년)에 하원 단독 과반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친기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는데, 향후 정책 추진에는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됨.
- 한편 EU의 지도자로 부상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실질적인 총선 패배로 국내정책을 더 우선시할 전망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직후 제안한 EU 통합 강화 역시 불확실성이 커짐.

